# 민주당, '日 후쿠시마 오염수' 총공세

## 이재명 "尹정부만 침묵으로 사실상 방류 용인"
## 박광온 "죄없이 형집행 기다리는 사형수 같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주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가 당장 오늘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절대 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국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국민 서명이 70만명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청구 ▲방사선 오염수 투기 설비 시운전 즉각 중단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진수 기자

#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교통정리'

## 의총서 지도부 겸직 금지·전직장관 제외…14일께 민주당 몫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골칫거리였던 자당 몫 5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한 기준을 결론지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수(選數)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도 두루 고려해 인선한 뒤, 14일 의원총회 보고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시간 30분 넘게 이어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기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설명했다.

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보류한 바 있다.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또는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위원장 후보군은 재선군으로 내려간다. 이상헌·김철민·서삼석·박재호·김두관 의원 등이 선순위 후보에 오른다. 다만 예결위원장의 경우 이날 본격 논의되진 않았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3선 이상의 중진 또는 현 21대 국회가 아닌 이전 국회에서 당직을 맡았거나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도 후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 보류에 강력 반발해 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새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의총에서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자리 보다 의사 결정 과정을 원했다"며 "상임위원장(선출의) 유권자인 국회의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밝혔다.

의총 후반부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혁신기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회의원과 사무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논의됐고, 혁신위의 역할 정립과 인선을 잘해서 쇄신과 혁신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기구를 둘러싼 당내 시각차와 관련해선 "오늘 의총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것들을 지도부가 잘 이해하고 반영해 혁신위의 인선과 역할 정립, 규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 양향자,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추진

## 26일 발기인대회…'금태섭 신당'과는 무관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합류 여부나 신당 명칭·비전 등은 발기인 대회 당일날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신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창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양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에 실패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양 의원은 2021년 7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같은 해 12월 복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5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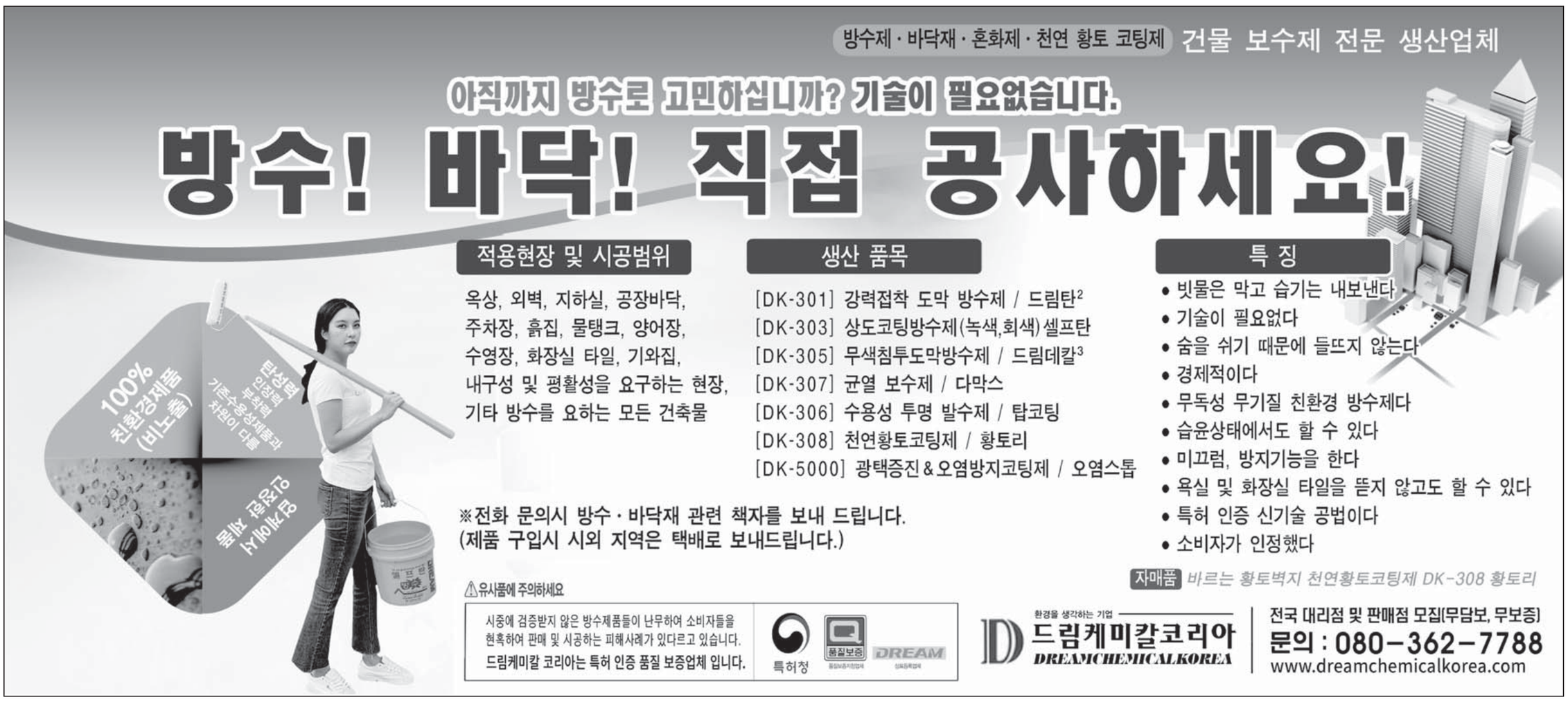
양 의원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특위를 이끌어왔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 /김진수 기자

# 김가람 "호남 소외감, 집권여당이 지켜드릴 것"

## 與최고위 첫 참석…"어느 지역도 포기 말라는 당원 요구"

국민의힘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은 12일 "지역(호남) 주민께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호남 41개 기초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1명도 없다. 무소속 단체장은 10명이나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 출신인 저를 70%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셨다"며 "제 당선의 결과는 어느 지역도, 어느 세대도 포기하지 말라는 국민과 당원의 엄중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호남 지지율 몇 퍼센트(%) 목표, 어떤 정책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이 제시했던 광주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 광주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롯데의 제3 롯데월드 구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지역민 요구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